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회의결과

◆ 일 시: ‘21.1.26(화) 16:00~17:00 (온라인 회의로 개최)

◆ 참석자

-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등

◆ 논의 안건

-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금융산업발전, 디지털혁신 과제

1. 개 요

□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4개 분과* 중 하나로,

* 정책·글로벌 / 산업·혁신 / 자본시장 / 금융소비자·서민금융

- 금융산업 발전과 디지털 혁신 등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

□ 지난 금발심 전체회의(1.18일)에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 1.26일에는 올해 첫 「금융산업혁신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업무계획 과제 중 ① 금융산업 발전과 ②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정책과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2. 주요 논의 사항

①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필요

- 선진국 금융체계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형태」로 접근 중
- 우리나라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각각 라이선스를 취해야는 구조에서 기능별인가제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금융에서도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

② 新 국제회계기준(IFRS17) 대응 철저 필요

- '23년 新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법규나 감독규정등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만큼 금융당국도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 보험회사도 新 국제회계기준에 대응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금융업권의 연착륙을 위해 감독당국 역시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

③ 금융의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완화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규는 핵심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해석, 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시에 기존 업권별 규제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

④ 금융소비자 편의 개선

-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보험계약자에서 일반 고객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환영할만한 부분
- 공인인증서 대체 민간인증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공공 기관 등에서도 민간인증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

⑤ 데이터의 활용 및 신뢰성 확보 측면

- 비식별화된 공공 질병·건강정보를 보험업에 활용하면 위험률 측정, 보험상품 개발에 도움이 되고, 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데,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 공유가 미진한 상황
-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한 공공데이터 확대·공유가 중요
- 다만, 데이터 결합, 활용 등 과정에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면 금융회사는 시장 경쟁력을 잃게 될 것
- 데이터 결합, 활용 과정에서 보안 등에 철저하되, 비식별정보 처리 등을 통해 활용 과정에서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등 신뢰확보 노력이 필요

참고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

성 명	현 직위	비 고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양재선	한국씨티은행 변호사	
오창수	한양대 경영학 교수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